

지역 노인일자리 사망 매년 3건...안전 대책 뒷전

2023년 이후 사고 1255건...북·서구 전국 상위 20위
전담인력 304명 중 233명 겸직...현장 관리 공백 우려

전남광주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상당수는 기존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 안전을 뒷받침할 인력과 관리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광주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2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348건, 2024년 404건, 지난해 315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까지 188건이 보고됐다. 같은 기간 사망사고는 2023년 2건, 2024년 6건, 지난해 1건, 올해 1건 등 모두 10건에 달했다.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참여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옛 광주 북구에서 120건이 발생해 전국 안전사고 상위 20개 지역 가



초등학교 급식지원사업단 퇴식구 및 식판 정리

운데 14위를 기록했다. 서구도 105건으로 20위에 올랐다. 전국에서는 경남 창원이 2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전주 249건, 충북 청주 168건, 인천 미추홀구 163건, 강원 원주시 160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1만2233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69건이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에서 1만464건이 발생해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올해 발생한 전국 사망사고 7건 가운데 4건은 교통사고, 3건은 넘어짐 사고로 파악됐다.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8월 기준 전남광주지역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의 필수 인원은 304명이지만, 신규 채용 인력은 71명에 그쳤다. 나머지 233명은 기존 담당자가 안전 업무를 겸하고 있어 일자리 사업 운영과 참여자 안전관리를 동시에 맡는 구조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기준 안전

전담인력의 법정 필수 인원은 2504명이지만 순수 신규 채용 인력은 607명으로, 전체의 24.2%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현장 활동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6개 기관이 적발되기도 했다. 안전관리 인력 배치와 관련 지침 마련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위험성평가 지원 등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실제 이행됐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44	달달	15:33
☀️	예보	17:49	달달	02:19



광주	☀️	8~18
목포	☀️	10~16
여수	☀️	9~16
순천	☀️	7~17
구례	☀️	7~17
광주	☀️	8~17
◡	☀️	8~17
진남	☀️	10~18
◡	☀️	10~18
진남	☀️	14~17
◡	☀️	8~17
진남	☀️	10~16

목포	밀물(고)	11:02 / 23:34
	썰물(저)	04:46 / 16:44
여수	밀물(고)	06:25 / 18:51
	썰물(저)	00:34 / 12:17

“폭동 표현 무죄 민주가치 훼손” 518단체·기념재단, 성명 발표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이 역사 왜곡 및 편협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오월단체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계시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깊은 유감이다”며 “이번 판결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체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항의를 폭압적으로 진압했던 군사반란을 오히려 폭동을 진압한 정당한 행위로 널리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5·18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와 가치는 보호될 수 없고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 가치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이게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모욕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현실은 우리가 이뤄 놓은 역사적 과정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 댓글과 유튜브 영상은 물론 게임, 기업 마케팅, 스포츠 응원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왜곡과 조롱이 나타나고 있다”며 “5·18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가 MZ세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단순한 법리 해석에 머물지 말고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작품 관람하는 시민들 21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동구형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2026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 학습자 작품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술 후 회복치료중 화상”...환자, 의료진 고소

마취 회복 전 핫팩 적용해...치료 과정 의혹 제기
일지 처치자 불일치...병원 측 “객관적 판단 필요”

개방성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회복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추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의 의료진을 고소했다.

〈본보 10월 17일 10면〉

21일 광주 남부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 남구 진월동 B병원장과 정형외과 의사, 당시 핫팩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진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5일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수술을 받은 뒤 회복실에서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다.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뜨거운 열을 인지하거나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핫팩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A씨는 핫팩을 직접 적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사람, 당시 환자 상태를 관찰·관리한 담당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행위자의 신원과 직종을 알지 못해 수술·마취기록과 회복실 기록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밝혀 달라는 취지다.

화상 이후의 치료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처음에는 일반적인 드레싱 처치를 받았지만 화상이라는 점을 제차 알린 뒤 화상연고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치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서는 2023년 11월2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화상 부위 소독이 이뤄졌으며, A씨는 이후 성형외과 진료를 받고 현재까지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간호일지에 처치자로 기록된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화상 부위를 반복적으로 처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물의 명칭이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제 처치자의 신원과 자격, 간호기록과 실제 처치 내용의 일치 여부, 병원 측의 관리·감독 적절성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의료법 제4조 제5항은 의료기관장이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행위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정한 의료인 등에게 명할 차용을 지시·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반 여부는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A씨는 화상 부위 사진과 진단서, 병원 의료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수사기관에 수술·마취기록과 간호·처치기록, 당시 근무자와 업무분장, 핫팩 사용 지침, 사고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핫팩의 적용 온도와 시간, 파파 보호조치 및 환자 관찰 여부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병원장과 수술 담당 의사라는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며 “치료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환자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과실 여부나 진료 과정의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나 법원 등 제3기관의 감정을 거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5·18 진상규명’ 홍남순 변호사 가옥 시민 품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고 홍남순 변호사의 가옥이 시민에 공개됐다. 이 가옥은 민주·인권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복원해 홍 변호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전남광주통합특설시와 (사)대인 홍남순변호사기념사업회는 21일 동구 공동에서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송형근 광주특별시의회 의장,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 황기연 광주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홍 변호사 가옥은 5·18 시작지 제29호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홍 변호사와 제야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논의하고 구속자 석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며,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역사적 장소다.

시는 2019년부터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135㎡ 부지에 있는 99㎡ 규모의 단층 건물을 보수하고 기념공간을 조성했다. 기념공간은 ‘민주·인권운동의 대부 홍남순 변호사’를 주제로 6개 테마로 구성됐다. ‘빛마루’에서는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5·18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등 홍 변호사의 생애를 연대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설시와 (사)대인 홍남순변호사기념사업회는 21일 동구 공동에서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기념식을 진행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의 민주사랑방’에는 사진과 고서, 유품, 훈장 등을 전시했다. ‘긴급조치 전문 인권변호사 홍남순’ 공간은 당시 변

호사 사무실을 재현하고 주요 사극사진에서 펼친 인권변호 활동을 소개한다. ‘5·18민주화운동과 홍남순’에서는 5·18 당시 광주를 지키기 위해 함께한 인사들

민주사랑방 등 6개 테마로 구성
민주주의·인권운동 발자취 조명

과 홍 변호사의 활동을 조명한다.

이 밖에 홍 변호사의 어록과 기념사업회 제작 영상, 방문객 참여 공간, 관련 도서 열람 및 휴게 공간 등을 마련했다.

기념사업회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홍 변호사가 실천한 민주·인권·평화 정신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데 힘을 기울인다. 앞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민주·인권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고향 우리 역사에 대한 기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홍남순 변호사는

1950년대부터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이뤄온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 온 역사와 미래 공동체를 책임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석부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시민들과 전남광주통합특설시의 도움으로 홍남순 가옥을 개관하게 됐다”며 “가옥은 특별히 소유지만 기념사업회가 위탁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홍 변호사는 1912년 전남 능주군(현 해운군 도곡면 호산리)에서 태어나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했다. 1970년대 유신독재에 맞섰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민주화 활동에 헌신했다. 2006년 10월 14일 별세했으며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